

검찰 '입법 로비' 강제구인...민주당 격앙

“정치검찰과 끝까지 맞서 싸우자”

최고위·의총, 검·정권과 전면전 선포 예산심사 거부...형소법 개정안 발의도

민주당은 17일 검찰이 전날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자당 소속 강기정 의원 및 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데 대해 '야당에 대한 폭거'로 규정,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하는 등 초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 유린 대책위'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당 지도부의 경북 상주의 상주보 건설 현장 방문 일정 전면 취소하는 대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손 대표는 이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면서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긴 소수의 정치검찰과 싸워야 한다.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 줄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현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뒤 "도대체 이 정권의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야겠다. 누가 국민의 검찰을 정권에 팔아넘기는가? 유다인지 밝혀야 하겠다"며 김윤옥 여사를 겨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야당을 죽이려면 깡그리 다 죽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87명 전원에 대한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경찰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밟으겠

다.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개시·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검경 수사 분리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검찰의 청복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체포사태를 끝으로 전방위적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대대적인 야당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장이 이날 자료를 통해 "여제 자행된 검찰의 강기정 의원 지역 사무국장 긴급체포 행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강압적인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예산 심의에 대한 전면거부에 나설 경우 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날 오후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이석현 의원을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언기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野 대치...예산국회 파행

검찰총장 출석 요구...예결위 2시간만에 정회

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청복회 수사와 관련, 자당 국회의원 측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데 반발,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부하면서 예산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오늘 진행하는 상임위는 참석하지 않고 예결위만 진행,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 게이트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후 회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사·지경·환경노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상임위별 법안 및 예산심사 소위도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현법상 시한인 다음달 2일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종

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 그것도 불법수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알선이나 청탁이니 하는 혐의를 둘러싸우는 등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정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봐주기식 축소 은폐 수사를 하는 검찰이 유독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은 "이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대통령실이 직접 사찰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석을 빙자해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소액 후원금' 제한 완화 추진 법안·단체도 기부 허용

여야가 최근 검찰의 청복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안과 단체의 정지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방향은 법안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이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논

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7일 "일단 고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현실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에 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준규式 공수 양동작전

입법로비 관련 민주당 관계자 전원 강제구인

특임검사 임명 '그랜저 검사' 전면 재수사 지시

16일 오후 검찰의 두 가지 행보가 국민의 시선을 확 끌었다.

하나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았던 '그랜저 검사'는 검찰총장이 대체로 10월 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체포사태를 끝으로 전방위적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대대적인 야당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장이 이날 자료를 통해 "여제 자행된 검찰의 강기정 의원 지역 사무국장 긴급체포 행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강압적인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거부와 함께

받은 혐의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

실 사무국장 김모씨, 같은 당 최규

식 의원측 전 보좌관 박모씨와 여

직원 등 3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날 하루 검찰이 꺼내든 두 가지 카드는 모두 김준규 총장의 결

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저 검

사' 재수사 지시는 김 총장이 직접

내린다.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